

최근 북한정보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명재진*, 이한태**

요약 본 연구는 북한정보 연구와 관련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연구 400편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정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상 범주 또한 특정 분야로 한정해야 함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 분야를 북한의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각 분야별 연구실적은 대체로 20%내외로 분포되어있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간유형별로 보면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단행본의 연구건수도 북한이외의 다른 정보 분야의 연구동향과 달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정치나 군사 분야가 북한관련 주된 연구영역이었던 경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양해진 북한에 대한 연구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향후 보다 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제어: 북한 정치·외교, 북한 경제, 북한 군사, 북한 사회·문화, 북한 인권

Analysis on North Korea Information Research Trend in Korea

MYUNG JAE JIN, LEE HAN T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research trend of 400 north korea information studies from 2010 to 2014 in korea. The research has narrowed the scope of analysis in five fields : political diplomacy, economy, the military, social cultur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each field evenly counts for 20% of the entire research. According to the types of publications, not only research papers but also graduate theses and books comprise a large proportion of the north korea information study. In the past, the north korea information study focused on political diplomacy and the military, but this research revealed different outcome. Now the study of north korea information has wide variety of subject, but it requires a qualitative growth. It remains still the problem of credibility in research data.

Keywords: political diplomacy of north korea, economy of north korea, the military of north korea, social culture of north korea, human rights of north korea

2015년 3월 4일 접수, 2015년 3월 5일 심사, 2015년 3월 28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onn@cnu.ac.kr)

** 충남대 법과대학 강사(idloi@naver.com)

I. 연구의 목적과 북한정보 연구의 특수성

헌법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집단인 북한에 관한 정보의 연구는 어려움이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폐쇄적이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집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 된다.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정보는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며, 이러한 정보는 분석 및 여과 과정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도 올바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신뢰성의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북한정보에 대한 왜곡된 발표와 확인될 수 없는 성격으로 인해 북한정보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았다. 또한 아직까지도 북한정권에 의한 의도적인 자료통제와 허위 발표로 인해 외부적인 올바른 분석이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과거의 문제점들은 1990년대 이후 탈북자 증대와 북한의 개혁조치로 인해 일부 개선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정보가 과거보다 수월하게 수집되고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의 탈북자지원 및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점차 정보의 암흑기가 극복되고 있으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 사회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0년대 이후 이른바 남북화해의 분위기와 세계의 여러 단체들의 북한 내 아사자에 대한 구호 손길 속에서 점차 북한도 이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세계사회에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인권의 정보의 축적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북한 정보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그 정보의 신뢰성 여부의 논란으로 인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늘 존재해 왔다. 과거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가

많은 회의론에 휩싸였다면, 최근에는 북한관련 연구를 외국에서 한 해외유학파 등이 귀국하여, 그들이 축적한 객관적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논문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쓴 학위논문들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북한정보 연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다른 어느 학문보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학문영역이 되고 있다. 이제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주류학문의 끝가지로서의 영역이 아닌 독자적인 북한학의 지위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 내부에서 연구된 북한정보도 있지만 유엔 등 외국에서 정리하고 제공하는 북한정보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로 인해 북한사회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과거보다는 다소 올바른 평가를 하게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여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학계에서 어떠한 주제들에 관해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지난 5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동향이 상호간에 신뢰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특정 분야에서 다른 분야와는 다른 새로운 주제들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또한 북한정보 연구에 관한 영역별 상호 피드백이 제공되고 있는지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필요성

북한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불법집단임(제3조 영토조항)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동반자(제4조 통일조항)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에서 확인되는 위와 같은 북한정권의 성격은 북한 연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여한다. 북한연구는 이러한 북한지위의 특수성으로부터 접근의 필요성이 발생하며, 하나의 분명한 사실로서 존재하는 북한집

단의 체제 및 문화 등에 관한 연구는 한반도의 역사적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출발한다.

강성운(2014)은 북한연구의 현실적 과제와 역할과 관련하여 북한연구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통일국가의 완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북한주민의 기아로부터의 해방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외면할 수 없는 인류보편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는 재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로서 민족구성원의 의사에 따른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들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한 파악과 비판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시대를 준비 없이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북한알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통일시대에 대한 관심은 북한체제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축적된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정보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연구가 우선되어 통일시대를 한층 더 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이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통일시대의 청사진을 창조해 내는데 일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부분적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어왔다. 북한 경제에 관한 GDP의 추정이나 경제성장률 등의 객관적 연구는 이제 학계에서나 시민들에게 신뢰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이고 북한사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본다.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들은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대립되어 있는 곳이어서 연구자들의 연구배경에 따라 평가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의 필요성의 하나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들이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해 보고 이러한 연구들이 특정 이념에 매몰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고 북한연구에 대한 객관성이 유지되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또한 본 리뷰논문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들의 경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총체적 사실을 평가해 보고 우리사회와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동질성예 기반을 둔 한반도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남북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구별해 내고 이를 한층 더 승화된 차원의 통합체로 이루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이질성을 찾아내고 이를 우리 문화와 통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본 연구가 향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의 방법론과 분석 틀

본 연구는 지난 5년간 자료를 분석 중심으로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해 본다.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는 일부는 상당부분 과학적 논문체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도 상당부분의 연구는 객관적 연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편견을 보이는 연구가 일부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우리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학회의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해 내기 위해 힘썼다. 이를 위해 과거 이념적 주관적인 연구태도를 보였던 연구들은 배제하고 최신의 객관적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북한 정보연구에 대한 접근은 북한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특정분야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북한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사회에 대한 그동안

의 오해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을 이해하는 정보 분석은 개별적인 사회분석이 아닌 총체적인 분석이 되어야 그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관련 정보와 정치 및 군사관련 정보가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도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동향에 있어서의 분석에 있어 가급적 편향적인 태도나 부분적인 경향이 아닌 북한정보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북한연구는 1990년대 이전까지도 국가안보차원의 연구를 위한 국방·외교 부문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대부분인데 비해, 1990년대 이후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과의 면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물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제 북한연구는 비교사회주의적 접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 역사-구조적 접근, 담론 분석, 텍스트 분석, 현상학적 접근, 일상사 연구 등으로 연구방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무철, 2011).

특히 탈북자들에 의해 수집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연구는 상부구조중심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북한연구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미시-행태연구에 치중하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사·미시사연구는 거시-구조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유한, 2009).

최근에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그 수도 증대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북한정보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분야의 북한연구의 흐름을 통해 새로운 경향을 분석하여 북한연구의 최신의 통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틀을 가지고 북한의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연구,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 군사 분야에 대한 연구, 사회·문화에 관한 연

구, 인권에 관한 연구에 관한 최근 5년간의 연구동향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5분야에 걸친 연구를 지난 학계의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여 그 흐름을 알아보고, 상호간의 관련성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은 체제의 특성인 강력한 독재체제로 인해 사회전반에 있어서의 민간부문의 영향은 적고 중앙의 당 및 의사결정기구의 독단적 지시나 명령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5분야에 대한 정치적 영향의 우위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동향의 검토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의 다른 영역에 대한 구조적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분야별 연구실적과 성향에 대해 분석한다. 각 연구 분야에 있어서 연구되는 주된 주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의 발간유형별 실적 및 각 분야 실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학계에서 나타나는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의 최근경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IV. 북한 정보 연구동향 분석 내용

1. 분석대상의 선정 및 그 범주

최근 북한정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관한 연구는 하나의 학문분야나 특정 학회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및 단행본의 수집 범위를 특정 학술지나 전공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고, 학술논문DB에서 키워드를 이용해 논문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주로 북한학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북한학(北韓學·North Korean

studies)은 북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학문이다. 북한의 사회체제, 사회생활, 정치, 외교, 경제, 행정, 지리, 문화어를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 등을 연구하는 학제적 학문분야이며,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북한학은 한국의 통일 문제를 포괄한다. 따라서 최근 북한정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과잉을 막고, 우리에게 관심분야가 되는 영역으로 본 연구의 대상범위를 축소한다.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분야를 북한의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고, 따라서 검색 키워드 역시 북한정치, 북한외교, 북한경제, 북한군사, 북한사회, 북한문화, 북한인권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는 사회문화의 개념이 관점에 따라 너무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역사, 순수예술 등의 분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다음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들에 대한 풀을 마련해야하는 바, 분석대상의 시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물들에 대하여 연구논문은 kiss(한국학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학위논문과 단행본은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연구결과물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개수는 연구논문 137편, 학위논문 150편(석사논문 109편, 박사논문 41편), 단행본 113편으로 총 400편이다.

2. 분야별 연구 실적과 연구동향

1) 정치외교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전체 연구건수는 86개에 달하며 분석대상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경제 분야 다음으로 연구건수가 많은 분야이다. 자료를 수집하는 초기에 예상으로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라고 예상했으나 미미한 차이지만 경제 분야 보다는 연구건수가 약간 밀도는 실적이다. 특히 학위논문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각대학원의 북한관련학과들에서 정치외교에 관한 주제의 논문들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는 독재정권의 분석(임혜성, 2010; 박형중 외, 2012; 이상우, 2014)과 김정은 시대 북한정치(정영철, 2012; 심혜정, 2013; 정창현, 2014)와 전망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외교 분야는 핵관련 외교문제(김성만, 2011; 전영선, 2011; 김계동, 2012; 왕선택, 2012)를 다룬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 주된 관심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북한체제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변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체제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한현동, 2014).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학계의 주요관심사이다. 이에 대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역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북한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

〈표 1〉 북한정보에 대한 정치외교 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21	29	9	27	86
		38			
비율	24.41%	44.18%		31.39%	100%

미 중국의 국경부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수차례의 훈련을 하였으며, 북한 급변사태시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 시에도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한국은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신진, 2014).

2) 경제

경제 분야에 대한 전체 연구건수는 88개에 달하며 분석대상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연구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경제특구의 지정과 시장화 등 북한의 정세 중에 경제 분야에 대한 정세가 가장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실적도 연구논문이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나 학위논문과 단행본과 더불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선군정치와 관련된 경제 분석(권오국 외, 2011; 안희창, 2011; 김수진, 2013) 및 북·중 경제협력에 관한 것과 경제특구(강미연, 2013; 김청하, 2013), 북한경제의 시장화 경향(김창희, 2010; 양문수, 2010; 오경섭, 2014) 등의 주제들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북한경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2015년으로 계획된 농업개혁이 예정대로 실시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북한의 1차 산업 부문부가가치 증가만으로도 북한경제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1차 산업 부문이 만약 중국의 농업개혁 후 중국의 1차 산업 성

장경로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GDP는 개혁 1년차에 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또한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등장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시장에 대한 유화적 정책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은 현재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화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양문수, 2014).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아직 낙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012년 남한의 2만 3,113달러에 비해 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인 중국 6,076달러, 베트남 1,528달러, 라오스 1,446달러 등에 비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김천구, 2014). 또한 북한은 현재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장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수시로 시장에 대한 검열을 통해 본보기 처단을 행하거나 각 단위의 무역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단행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치자본의 통제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에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시장 또는 자본가를 관리하는 전략인데, 이것은 일정한 정도의 시장 영역의 확장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용납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광수, 2013).

3) 군사

군사 분야에 대한 전체 연구건수는 80개에 달하며 분석대상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연구건수라 여겨진다. 최근 들

〈표 2〉 북한정보에 대한 경제 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34	21	8	25	88
		29			
비율	38.63%	32.95%		28.40%	100%

〈표 3〉 북한정보에 대한 군사 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32	17	12	19	80
		29			
비율	40%	36.25%		23.75%	100%

어 군사관련학과가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생기면서 연구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특이할만한 점은 학위논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의 비중이 다른 분석대상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 역시 군사관련학과가 많이 생겨나고 교수요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결과로 여겨지며, 특히 오랜 군경력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서 학위논문이 작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사 분야 전체 연구건수에서 연구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바, 이는 박사학위논문편수에서 알 수 있듯이 박사학위 소유의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미사일과 대남도발(장영선, 2012; 정경두, 2012; 홍우택, 2013) 및 김정은 체제의 군사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황일도, 2013; 하태영, 2014).

군사영역에서 상당부분 차지하는 연구주제는 북한 핵의 문제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DA통제 및 금융제재 그리고, 다자억지 전략수단인 확산방지구상(PSI), 6자회담 등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군사력 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6자회담, 유엔외교를 활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켜냈지만,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임상순, 201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핵억제 능력과 의지를 평시에 북한에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부담과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박창권, 2014).

4) 사회문화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전체 연구건수는 74개에 달하며 분석대상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두 번째로 적은 수에 해당한다. 사실 사회문화 영역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그 범주는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 역사, 문학, 순수예술 등의 분야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연구건수가 적은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 내부의 사회문화에 대한 현상보다 탈북자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이를 제외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하다. 그러나 연구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김석향, 2012), 각종사회제도(김홍석, 2010; 민기채, 2011), 심지어 권력과 성의 연관성(우정, 2012) 등 다른 분야의 연

〈표 4〉 북한정보에 대한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28	20	6	20	74
		26			
비율	37.83%	35.15%		27.02%	100%

구에 비해 매우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북한연구의 최근의 경향 중 중요한 흐름은 그동안의 정치나 군사위주의 연구보다 일상생활중심의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연구방법이 전체주의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고, 일상생활연구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다. 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내재적 접근'보다 인류보편가치에 입각한 보편주의적 북한접근('외재적 접근')과 지역학(area studies)으로서의 북한연구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인류보편적 잣대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유환, 2009).

북한에서 새롭게 등장한 모란봉악단에서 북한문화의 새로운 경향을 볼 수 있다. 모란봉악단 공연은 김정일의 지시로 만들어진 악단이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담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 대내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란봉악단은 억압과 통제 우선의 통치가 아니라 이미 북한 상류층을 비롯해 하층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남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외부문화에 대한 동경을 북한식 문화로 해석하여 호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강동완 외, 2013).

5) 인권

인권 분야에 대한 전체 연구건수는 72개에 달하며 분석대상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연구 실적이 가장 저조한 분야이다. 그러나 분야별 연구 실적건수가 평균 80개 내외로 되어있어 연구실적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한 북한인권 정보센터와 통일연구원 두 곳에서 매년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하는바 이를 2014년분만 통계에 넣었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백서 5년 치를 포함한다면 인권 분야도 80건에 달하는 연구실적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여타 다른 분야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북한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가 인권분야가 아닌가 싶다. 발간유형별 연구건수도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단행본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북한 내부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동향과 탈북자들의 인권연구가 주된 내용을 이루며(김윤태, 2012; 노용시, 2013; 서보혁, 2014; 임미주, 2014), 특히 가장 최근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왕성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김경화, 2010; 김일기, 2011; 박민정, 2014; 황창현, 2014).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3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위원회(2006년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리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다수국가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있는 등, 취약한 북한인권상황은 한 개별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문제가 되었다(임상순, 2012).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세습공산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통제에 최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은 북한 내부에 항상 존재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학자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안

〈표 5〉 북한정보에 대한 인권 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22	22	6	22	72
		28			
비율	30,55%	38,88%		30,55%	100%

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하고, 이의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개혁·개방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성우, 2014).

6) 소결

앞에서는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 등 총 5가지 분야의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실적과 각각의 성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각의 것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연구보고서의 경우는 그 실적이 너무 미미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감안하면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민간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분야별 연구실적은 대체로 20%내외로 분포되어 있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발간유형별로 보더라도 학위논문과 단행본의 연구건수도 북한이외의 다른 정보 분야의 연구동향과 달리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발간유형별 연구건수가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균형을 이루며 고르게 분포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최근의 연구는 특징은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북한 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연구가 상당히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1990년 이후 어려웠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주변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의 연구 분야 중에서는 위의 영역들 중 2개 영역이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구가 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과제’ (김연철, 2013), 북한의 경제개혁과 안보환경의 상호작용’ (김유리, 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박형중, 2014)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도 북한이 독재체제로 인해 정치가 참여하는 비중이 다른 영역보다 절대적으로 앞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경제 영역이 이러한 정치 영향력의 지배하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의 발간유형별 실적 및 각 분야 실적

1)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의 발간유형별 실적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의 발간유형별 실적을 보면 학위논문이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으며, 학위논문 150건 중 박사학위논문이 41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1990

<표 6> 북한정보에 대한 분석대상 분야의 연구실적에 대한 분석 종합

번호	분야	연구실적			합계	비율	순위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1	정치외교	21	38	27	86	21.5%	2
2	경제	34	29	25	88	22%	1
3	군사	32	29	19	80	20%	3
4	사회문화	28	26	20	74	18.5%	4
5	인권	22	28	22	72	18%	5

〈표 7〉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의 발간유형별 실적

구분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137	109	41	113	400
		150			
비율	34.25%	27.25%	10.25%	28.25%	100%
		37.50%			

년대부터 대학원과 학부의 북한학과 설치에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학과 개설은 1988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이 있었고, 1990년 북한전공을 북한학과로 한 것이 효시이다. 이후 학부 수준에선 1994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를 시발로 모두 6개의 북한학과가 설치되었고, 1998년 경남대 북한대학원이 개설됨으로써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제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특히 경남대학교와 이를 토대로 설립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다수의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면서 학위논문을 통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위논문이 증대 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국대 등 북한관련학과와 각 대학의 군사관련학과 의 대학원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단행본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 연구동향에 관한 실적보다 월등한 수치를 보이는 것도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동향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반면 학술지를 통한 연구논문의 실적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바, 이는 분석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KISS-한국학술정보)에 한정해서 선

정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2)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의 발간유형별 각 분야 실적

(1) 학술지

학술지의 연구논문을 분석해 보면 비교적 정치외교 분야의 연구건수가 부족하나 이는 탈북자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논문을 제외하고 북한 내부의 문제만 주제로 한 논문만 선별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의 수치적 편차는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정치외교 분야는 새로 들어선 김정은 체제의 정치외교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다른 분야에 비해 최근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은 경제 분야는 북한의 경제특구 및 빠른 시장화 관련 추세에 따라 경제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산된다. 군사관련 분야 역시 3대 세습과 김정은 정권의 출연, 핵개발과 관련한 연구물들이 시대적 추세에 따라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문화(역사·문학·순수예술 제외) 및 인권분야(탈북자 제외)의 주제를 제한한 것을 감안하면,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의 각 분야에서 큰 편차 없이 고르게 연구실적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북한정보에 관한 학술지 연구의 분야별 실적

구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	합계
연구건수	21	34	32	28	22	137
비율	15.32%	24.81%	23.35%	20.43%	16.05%	100%

(2) 학위논문

학위논문의 특이한 점은 학술지의 연구논문에 비해 오히려 정치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이 높은 편인 바, 이는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대학원 등 북한학관련 대학원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주제를 학위논문의 주제로 선호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주제 역시 김정은 체제나 핵관련 외교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1960-79년대 미국 등지로 유학을 가서 소련 및 중공과 같은 공산권 연구를 하고 돌아와 정부의 북한연구 지원에 힘입어 북한연구의 기반을 만든 북한연구 2세대의 제자들이다. 북한연구의 제3세대에 속하는 이들은 사회과학연구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외국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연구하여 오늘날 한국의 북한정보연구를 풍성히 하고 있는 전문가 군에 해당한다(김영수, 2006).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의 경우 학술지 연구논문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19%미만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분야는 북·중, 남·북간 경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고, 군사 분야는 북한의 군사전략과 비대칭위협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

(3) 단행본

단행본의 경우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의 각 분야에서 큰 편차 없이 고르게 연구실적들

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외교경제 분야에 대한 출판물이 많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그래왔고, 정치외교경제 분야의 누적된 학자 수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연구 실적이 저조한 군사 분야의 경우 최근 들어 늘어난 군사관련 학과의 교수요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연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문화 및 인권 분야는 시대와 연구유형에 무관하게 꾸준히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연도별 연구실적 추이

북한정보에 대한 연도별 연구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 연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시 2013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석대상 연구물들을 살펴본 결과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으며, 2011년 12월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권력을 승계하는 등 북한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음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여러 가지 연구소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2011년과 2012년에 다른 해에 비하여 연구건수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9〉 북한정보에 관한 학위논문 연구의 분야별 실적

구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	합계
연구건수	38	29	29	26	28	150
비율	25.33%	19.33%	19.33%	17.33%	18.66%	100%

〈표 10〉 북한정보에 관한 단행본 연구의 분야별 실적

구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	합계
연구건수	27	25	19	20	22	113
비율	23.89%	22.12%	16.81%	17.69%	19.46%	100%

〈표 11〉 북한정보에 대한 연도별 연구실적

번호	년도	연구건수	비율	순위
1	2010	59	14.25%	5
2	2011	101	25.25%	1
3	2012	90	22.50%	2
4	2013	71	17.75%	4
5	2014	79	19.75%	3
	합계	400	100%	

V. 향후 북한정보 연구를 위한 제언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북한의 특수적 성격인 불법집단성과 도발위협성으로 인해, 주로 북한의 정치체제나 군사영역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내 연구소들의 활동 덕분에 북한연구는 어느 정도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이루기 시작했고, 수많은 탈북자의 진술과 국제적 자료들을 통해 북한내부의 일상의 모습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연합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북한 내 인권침해와 탄압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제재결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환경의 긍정적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문화와 다른 북한의 모란봉악단의 존재라든가 또는 중앙집권적 통제의 사회로 인한 경제성장의 후진성 그리고 세계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심각한 인권탄압은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북한 사회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동향 분석은 북한정보 연구에 관한 5개 분야의 최근 5년간의 400편의 학문적 성과물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정치·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체제분석과 김정은 시대 북한정치 그리고 핵관련 외교문제가 그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경향이 지적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로 인한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가 일반적 흐름이 되고 있다.

셋째, 군사 분야에서는 핵개발에 관한 논란이 연구의 중점주제가 된다.

넷째,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탈북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인권분야에 있어서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이 많았다.

연구동향의 전체적 분석을 통해 보면, 현재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문제와 북한 경제개혁에 관한 논문이 증대하고 있고, 탈북자들에 의해 고발된 북한 인권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와는 달리 신뢰성 있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들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상호간의 피드백과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는 일정 부분 정보의 불명확성과 허위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각종정보의 혼선과 변덕스러움은 북한정보에 대한 파악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보충으로 주장되고 있는 선군사상의 실체나, 발표만 있고

실천이 없는 북한식 경제개혁의 본질은 북한정보를 분석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북한매체의 보도내용이나 북한 출판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는 분석이 아닌 해석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영수, 2006).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는 이제 새로운 방법론과 정책적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정보에 관한 연구에 아직도 전문적인 접근이 아닌 정보해석에만 치중하는 논문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정보 연구에 아직도 양적인 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연구실적에 거품이 많다고 본다. 그동안의 연구가 북한정보에 대한 사실수집에 그치고 전문가다운 분석이 적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의 매체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적 정보수집 위주의 연구는 향후 전문분야에 관한 충실한 심층적인 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사회에 대한 시사적 연구가 아닌 학문적 수준의 북한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북한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학적, 법학적 그리고 행정학적 측면의 전문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북한정보에 관한 우리시각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각이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연구의 대부분이 우리내부의 시각에 의한 북한정보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분석한 자료들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북한정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우리의 시각은 이제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본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자료들을 통해 과연 그동안의 우리가 해온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 평가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셋째, 민간 연구자들이 북한정보 수집에 있어서 많은 접근성의 한계를 지니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북한정보나 자료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정보는 그 특

수성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어서 국가의 폭넓은 자료공개 없이는 객관적 분석이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북한정보에 관한 획기적 공개를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통합적인 북한정보자료 공개를 위한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정보에 관한 가치 중심적 연구들이 미약하다고 본다. 북한정보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들에 비해 유난히 단순한 해석과 사실전달에 그치고 있어서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가치 중심적 분석이 되지 못해 향후 연구의 목표나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연구자는 북한정보에 대한 분석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 연구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정보 연구자의 목표가치의 확립이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체계가 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가 북한정보 연구자에 전제되어야 할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북한 정보 연구자들이 자신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는지 반추해 보는 성찰의 기회가 필요하겠다. 북한정보에 관한 가치 중심적 연구는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가치 중심의 북한정보 연구가 남북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완·박정란 (2011). 「한류 북한을 흔들다(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서울: 늘품플러스.
- 강동완·박정란 (2013). “김정은의 “문화정치”: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 200-214.
- 강동완·박정란 (2014).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북한학보」, 30(2): 110-151.

- 강명세 (2011). 「북한인권지표 및 지수개발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 강명세 (2014). 「비교적 시각에서 본 북한독재체제는 어떻게 장수하는가?」. 서울: 세종연구소.
- 강미연 (2013). “개성공단 경제특구의 작업장 문화.” 「북한학연구」, 9(2): 113-137.
- 강성운 (2010).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선인.
- 강성운 (2014). “북한연구의 현실적 과제와 역할.”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1 :43-48.
- 강재석 (2010). 「북한 대남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1). 「북한생활문화연구 목록」. 서울: 선인.
- 경기개발연구원 편집부 (2010).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대북 경제협력 방향」.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고유환 (2009).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 : 29-71.
- 고유환 (2011).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 「북한학연구」, 7(1): 5-24.
- 고재홍 (2011). “북한 군사정보 수집 및 사례분석.” 「군사논단」, 66: 59-84.
- 고재홍 (2011a).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 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고재홍 (2012). “북한 김정은체제와 남북군사관계 전망.” 「군사논단」, 72: 15-44.
- 고재홍 (2013). “김정은 체제의 북한군 수뇌부와 대남도발.” 「군사논단」, 74: 98-120.
- 곽명일 (2012). 「북한 ‘지역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해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수진 (2014). 「북한 여성의 출산 경험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갑우·김갑식·이무철·이수훈·최봉대 (2010).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서울: 한울.
- 구갑우·김갑식 (2011).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 권수현 (2010). “북한 조선민주여성동맹의 변화와 지속.” 「사회과학연구」, 8(2): 8-39.
- 권양주 (2012). “김정은 시대 북한의 WMD 정책 변화 및 확산 전망.” 「군사논단」, 72: 45-68.
- 권양주 (2014). 「북한군사의 이해(김정은 시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권영태 (2011).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서울: 이매진.
- 권오국·문인철(2011).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전개와 정치변화 -선군정치경제의 시원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7(2): 135-171.
- 권태상 (2012). “북한 경제사 연구: 1970년대 대외 개방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5(1): 95-121.
- 금기연 (2010). 「북한의 군사협상행태와 결정요인 :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사례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화 (2010).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배경과 내용연구 : 일본 북한인권법과 비교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동 (2012).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협상과 도전의 전략적 선택)」. 서울: 명인문화사.
- 김국신·김연수·서보혁 (2010). 「북한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김광수 (2013). “북한 선군사상의 현재성 정도에 관한 분석.”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05-136.
- 김근식 (2011). “동북아 인권 레짐과 북한 : 인권개선의 시사점.” 「한국정치연구」, 20(1): 187-207.
- 김근희 (2012). 「북한의 문화교양사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호 (2010).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환 (2012). 「국가와 인권이론 고찰 및 북한인권 분석」.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달인 (2013).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림 (2011). 「북한의 비대칭전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효과적인 억제전략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형·최종진 (2012). “북한의 국제경제 세계관 분석 : 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KWP)」, 28(4): 97-131.
- 김동엽 (2013). “북한의 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2): 87-117.
- 김동엽 (2013).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환 (2010). “북한의 남한 법, 제도 및 국내정치 연

- 구.” 「북한연구학회보」, 14(1): 29-58.
- 김두환 (2010).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한정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만중 (2011).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군 대비방향 : 비대칭전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호·김병섭·김상규·박형래·손진기 (2011). 「한반도 통일과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청람.
- 김문재 (2014). 「핵개발에 따른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로 (2011). “3차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정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5(1): 59-84.
- 김병로 (2011a).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8(2): 147-173.
- 김병로 (2012).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16(1): 93-121.
- 김병연 (2011). 「북한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 「POSRI 경영경제연구」, 11(1): 63-81.
- 김병오 (2014). 「노무현 정부의 ‘북한핵문제’ 대응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욱 (2011). 「현대전과 북한의 지역방위」. 서울: 선인.
- 김상욱 (2011).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태 (2014). 「북한의 적극공세에 대한 한국의 외교안보의 대응방안」. 「한국동북아논총」, 71: 209-226.
- 김석향 (2011).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5(1): 85-110.
- 김석향 (2012).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6(1): 191-216.
- 김석향 (2012a). 「내 공적(公的), 사적(私的) 인권담론 분석」. 「사회과학연구논총」, 27: 243-273.
- 김석호 (2012). 「북한 비대칭 군사위협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만 (2011).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 북한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주 (2012).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과정 연구」. 「통일연구」, 16(2): 122-161.
- 김수암·김학성 외 (2010).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수암·김국신·김영운·임순희·박영자·정은미 (2011). 「북한주민의 삶의 질(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 김수암·이금순·김국신·홍민 (201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KINU.
- 김수진 (2013). 「김정일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이 북한의 시장정책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2013). 「북한 식량정책의 주민 순응화 전략 연구」. 「북한학연구」, 9(1): 63-91.
- 김연철 (2013).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북한연구학회보」, 17(1): 31-55.
- 김영규 (2012). 「통치이념과 문화유산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수 (2006).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50: 25-54.
- 김영운 (2011).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의 과제 -라진, 선봉지역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20(2): 24-55.
- 김용귀 (2010). 「북한의 경제특구 조세제도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서 (2012).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의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세계정치」, 16: 237-288.
- 김용현 (2013).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 1948~1980」. 「북한연구학회보」, 17(2): 149-169.
- 김유리 (2014). 「북한 경제개혁과 안보환경의 상호작용 : 북한·중국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태 (2012).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태 (2013). 「북한 인권 연구 : 개입주체, 개입방식, 대응유형」.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의식 (2014).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전략」. 서울: 선인.
- 김익신 (2011). 「북한 경제개혁조치와 북한경제의 변화」.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익환 (2012). 「남북한 군사적 갈등관리와 신뢰구축 방안」.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태 (2010).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분석 및 전망」. 「군사논단」, 63: 29-52.

- 김일기 (2011).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대응전략.” 『동북아연구』, 26(2): 129-147.
- 김일한 (2011). “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과 북중경제협.” 『글로벌정치연구』, 4(1): 7-29.
- 김재웅 (2014).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철 (2011). “남북한 군사회담과 군사적 긴장완화 가능성.” 『서석사회과학논총』, 4(1): 147-173.
- 김중수 (2010). “북한 대중운동 연구: 권력승계 측면에서 비교한 “150일전투”와 “70일전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8(1): 150-180.
- 김주삼 (2010). “북한의 대 중동군사외교: 전략무기체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5(2): 39-59.
- 김주환 (2012). “북한 경제활동 동인(動因)으로서의 북한 화교(華僑)의 역할.” 『세계지역연구논총』, 30(1): 159-184.
- 김지은 (2011).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주민에 의한 “일상적 저항”의 정치」.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형 (2013).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경쟁: 공개 외교문서(1979~1981)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8(1): 5-35.
- 김진철 (2010).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주민 성분분류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환 (2010).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14(2): 23-48.
- 김창곤 (2011). 「북한 군사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북한군 사정책의 변화: focusing on the DPRK's military」.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희 (2010).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 경제적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4(2): 49-75.
- 김창희 (2012). 「북한정치와 김정은」. 서울: 법문사.
- 김창희 (2013).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67: 123-144.
- 김천구 (2014). “논단: 2012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통일경제』, 79: 83-90.
- 김청하 (2013). 「경제위기 이전의 북·소 경협과 경제위기 이후의 북·중 경협 비교연구: 북한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산 (2011).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안보능력 강화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우 (2011). 「남북한의 통일정책 전개과정 연구, 1954~61년: 무력통일론에서 평화통일론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웅 (2011). “남북한 군사전략 구도 하의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과 그 대비.” 『동북아연구』, 26(1): 1-17.
- 김태웅 (2013). “제3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67: 21-46.
- 김태진 (2010). 「북한사회 계급 갈등구조의 변화 분석」.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훈 (2013).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력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필재 (2014). 「북한의 사이버 남침」. 서울: 백년동안.
- 김혜원 (2011). 「북한의 남북정치 협상연구」. 서울: 선인.
- 김환기 (2012).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신문사설 내용 분석: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2014). 「북한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주 (2010). 「북한 난민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실천: 북한인권법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석 (2010). 「북한보건의료제도에서 ‘무상치료제’의 함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근우 (2011). “북한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유일영도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균열.” 『동서연구』, 23(1): 221-255.
- 남기훈 (2010). 「남북협력개발 방향 모색을 위한 북·중·러 접경지역 실태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성욱·정유석 (2012).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북한의 경제)」. 서울: 살림.
- 노용시 (201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와 적응지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유경 (2011).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런밍 (2011). “2000년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분석.” 『동북아연구』, 26(2): 149-172.
- 류현정 (2012).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행위자-연결망이론(ANT)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림금숙 (2010).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창

- 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무전직기 (2010). 「김정일 시대 북한 사회통제의 변화 : 사상, 생활, 물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대근 (2013).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준식 (2011). 「북한 핵심엘리트 관계망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치시타 나루시게 (2014).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서울: 한올아카데미.
- 민경태 (2013).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기채 (2011). 「북한 사회복지 연구 동향」. 「사회복지연구」, 42(3): 5-32.
-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관수 (2010). 「하나 아렌트의 전체주의론에 의거한 북한 정치체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형·남창희·이원우 (2011). “북한 미사일 위협 감소를 위한 한,미,일 공군 차원의 협력 방안.” 「한일군사문화연구」, 12: 3-35.
- 박명규·송영훈·김병로 (2014). 「북한주민통일의식(북한 이탈주민에게 묻다, 2008-2013)」.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 박명규·정은미·장용석·송영훈 (2014a). 「북한사회변동」.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 박민정 (2014).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관한 연구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결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2010). 「북한의 지방문화의 획일화와 지방공동체의 해체」. 「북한학연구」, 6(2): 121-145.
- 박신영 (2014). 「북한 청소년 놀이문화 연구 : 혜산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자 (2010).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3): 135-168.
- 박영정 (2011). 「북한 문화예술 현황분석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용국 (2014). 「북·중관계 재정상화 성격 연구 : 제2차 북핵실험 이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석 (2010). 「남북한 건설 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 방안」.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박용석 (2012).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 연구 (북한 내 최우선 건설 수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박용환 (2010). “북한(北韓) 군사전략(軍事戰略)에 관한 (寬限) 연구(研究) -핵개발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6(1): 119-146.
- 박용환 (2012).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국방정책연구」, 95: 189-218.
- 박용환 (2012a).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전쟁전략(선군시대 북한 군사전략)」. 서울: 선인.
- 박윤희 (2013). 「미국 내 북한인권법의 확산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란·강동원 (2013).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북한학연구」, 9(2): 199-235.
- 박제훈 (2014).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변화 전망 -정치경제학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21(1): 79-112.
- 박종석 (2011).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호카이도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박종선 (2012).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원인과 유형」.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중득 (2014). 「북한 진출 기업을 위한 경영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Opportunity & Risk」.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 (2013).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 전망이론 모델의 구축과 적용」. 「북한연구학회보」, 17(1): 57-92.
- 박지현 (2012). 「대북정책과 여론 :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건·손기영·최청호 (2011). “북한의 대(對)일 협상전략 -약소국과 중견국의 외교행태와 협상목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2): 137-161.
- 박창권 (2011). 「북한의 핵확산 위험과 한국의 PSI 참여 확대 방안」. 「군사논단」, 66: 112-132.
- 박창권 (2014).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104: 155-196.
- 박창일 (2011). 「북한 혁명전통의 통치이데올로기화에 관한 연구 : 해방신학의 ‘해석학적 순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박현옥 (2010). “북한 3대 세습체제에 따른 북한의 변화와 대남 영향 : 김정은 세습체제의 군사정책 전망.” 「군사논단」, 64: 39-69.
- 박현옥 (2012).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군사정책 특징과 전망.” 「군사논단」, 69: 21-47.
- 박현옥 (2013). “북한 3차 핵 실험과 한국 안보의 과제.” 「군사논단」, 73: 9-34.
- 박형중·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태환·송영훈·장용석 (2012).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북한 관련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 박형중·최사현 (2013).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 박형중 (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향 :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1-28.
- 박혜련 (2011). 「북한 인권의 변화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휘락 (2012).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 주도 한미연합지휘체제로의 개편.” 「군사논단」, 70: 132-155.
- 박휘락 (2013).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대비방향: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군사논단」, 73: 35-52.
- 박휘락 (2014).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대피 조치의 필요성과 과제.” 「군사논단」, 79: 116-138.
- 박희진 (2010). “7.1 조치 이후 북한 여성의 사경제 활동.” 「통일연구」, 14(1): 93-125.
- 박희진 (2012). “북한경제의 개방화 구상과 반개혁의 이중주.” 「북한학연구」, 8(1): 35-64.
- 방은주 (2010). 「SW를 통한 북한경제 활성화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호엽 (2014).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방위정책과의 상관관계.” 「한일군사문화연구」, 17: 121-153.
- 방효남 (2011).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일권 (2012). 「북한의 군비증강 동인과 그 역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정호·박재적 (2011).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핵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백범석·김유리 (2014).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 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21(1): 43-99.
- 백연주 (2014). 「북한잡지에 나타난 대중선전선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학순 (2010). 「북한 권력의 역사(사상 정체성 구조)」. 서울: 한올아카데미.
- 북한연구학회 (2014).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 북한연구학회 (2014a).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선군인가, 선경인가)」. 서울: 한올아카데미.
- 북한인권사회연구소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북한인권정책연구 2013)」. 서울: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연구소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서울: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4).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4a).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2014)」.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서보혁 (2011). 「코리아 인권(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서울: 책세상.
- 서보혁 (2014). 「북한인권(이론.실제.정책)」. 서울: 한올아카데미.
- 서상현 (2011). 「김정일 정권의 대남 군사도발 유형과 대응책」.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선 (2014). 「북한의 문화자본과 사회계급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창원 (2012).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종률 (2012). 「남북한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용수 (2014). 「통일시대 변화의 현장에서 본 북한」. 서울: 미래문화사.
- 성채기·김진무 외 (2014). 「북한 경제규모의 대안적 추계와 불평등의 실상(구매력환율, GDP, 지니계수 및 식량난 수준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소 (2011).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 소현정 (2013). 「북한의 위기조성전략과 북중미 관계」.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광수 (2010). 「남한 정치사회의 북한인권문제인식 교차현상 연구 : 정부 및 인권운동단체의 대북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병선 (2012). “북한의 정치문화와 3대 세습.” 「한국동북아논총」, 65: 133-150.
- 손병선 (2011).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규범통제로 알아보는 북한의 법실현)」. 서울: 한국학술정보.

- 송동우 (2013).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대북한 군사 개입 가능성 검토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17(2): 65-102.
- 송종규 (2013). 「북한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혜진 (2013). 「유엔인권레짐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역할과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천 (2011). “중국의 대북투자과 북한경제.” 『통일연구』, 15(1): 5-21.
- 신유리 (2013).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제도화 방안 :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여성권」.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진 (2014). “북한의 급변사태와 국제안보: 중국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22(4): 143-166.
- 신형욱·김용범 (2011). “북중 문화교류를 통해 본 현 단계 남북한 문화교류의 진단과 평가 -단일 극(劇) 양식의 공연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5(2): 195-216.
- 심은명 (2010). 「선군사상의 북한 대외정책에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정 (2013). 「김정은 체제 권력엘리트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득기 (2011).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행태에 관한 연구: 1차 핵 위기를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4(2): 95-116.
- 안희창 (2011). “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북한학연구』, 7(2): 173-202.
- 양문수 (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서울: 한올아카데미.
- 양문수·김병연 (2012).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양문수·이석기 (2012a). 「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서울: 산업연구원.
- 양문수·김석진·이영훈·임강택·조보현·이석기 (2013).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 양문수 (2014).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양범 (2010). 「북한 핵실험 관련 국제정치보도기사의 내용분석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창 (201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국제정치연구』, 14(2): 21-43.
- 양승주 (201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운철 (2012). 「북중 광물자원 교역의 증가에 따른 북한 경제의 대중국 종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 서울: 세종연구소.
- 엄경영 (2010). 「북한 헌법에 나타난 수령제 사회주의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상운 (2014).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안보 정치 경제적 위협」. 서울: 세종연구소.
- 연정은 (2013). 「북한의 사법·치안체제와 한국전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섭 (2013). 「북한시장의 형성과 발전(시장화 특성과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 세종연구소.
- 오경섭 (2014). 「북한 시장화와 불안정한 사유 재산권」. 서울: 세종연구소.
- 오승렬 (2010). “북, 중 경제관계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북한연구학회보』, 14(1): 1-28.
- 오중문 (2014). 「남·북한 국제경쟁력지수 분석을 통한 산업협력에 관한 연구 : 현시적 비교우위와 산업내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즈카켄지 (2013). 「귀화자와 북한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항균 (2012).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왕기공·김민영 (2011). “북한 나선 경제무역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개방의 경제적 의미.” 『지역발전연구』, 11(1): 85-95.
- 왕선택 (2012).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추세 분석, 1992년-2011년 : 국내정치 주기와 ‘예정된 비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효영 (2013). 「1990년대 북한의 정치체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정 (2012). 「북한사회의 성과 권력」. 서울: 이경.
- 우평균 (2011). “러시아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동향.”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187-209.
- 원지예 (2012). 「대북 경제제재를 통한 인권개선 방안 연구 : 리비아와 이라크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보현 (2010). 「해주 경제특구 개발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재 (2011). 「한국 정부의 대 북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 군사위기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진우 (2011). 「북한의 국제정치경제 인식 연구 1989년-2000년 : 정책과 담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정 (2012).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 정비 평가(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중심으로)」. 서울: 세종연구소.
- 윤규식 (2010). “북한 3대 세습체제에 따른 북한의 변화와 대남 영향 : 김정은 후계체제와 북한의 군사위협.” 「군사논단」, 64: 70-98.
- 윤규식 (2011).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위협 전망.” 「군사논단」, 68: 64-95.
- 윤규식 (2012). “북한의 군부 개편이 대남 도발에 미치는 영향.” 「군사논단」, 72: 69-97.
- 윤덕민·김근식 (2011).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사회통합적 시각」.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윤여상·구현자·김인성·이지현 (2011).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제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여상·이자은·한선영 (2011a).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체제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우 (2011).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은주 (2014). 「한국교회의 북한인권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 (201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창·정광진 (2011).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특징과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 이규창·김수암·이금순·조정현·한동호 (2013).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KINU.
- 이규창 (2014).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하여 -.” 「국방연구」, 57(3): 57-85.
- 이금순, 전현준 (2010).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금휘 (2014). 「북한과 중국의 경제지정학적 관계와 협력 활성화」. 서울: 선인.
- 이기덕 (2014).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 이익의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식 (2014). 「김일성의 정치종교적 ‘신성화’ 연구 : 1945년-1974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완 (2012). “일본의 북한인권정책의 본질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19(3): 143-162.
- 이나영 (2012). 「북한 사회의 이상적 남성성 : 2004년 이후 제작된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우 (2012). 「탈북자와 함께 본 북한사회(북한문제의 딜레마와 해법)」. 서울: 오름.
- 이동환 (2012). 「북한의 ‘우리식 인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수 (2012). 「북한 ‘자주의교’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에 관한 연구 : ‘56년 권력투쟁’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몽룡 (2010). 「동맹관리와 북-중 동맹 : 1, 2차 북핵 위기 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철, (2011). “북한연구방법론 논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1: 81-83
- 이미숙 (2010). “북한의 남북한 군사협상 결정요인 고찰.” 「국방연구」, 53(1): 71-107.
- 이봉구 (2011).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빈 (2011).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 외교네트워크 연구” : 『조선중앙년감』(1997~2001)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우 (2012). 「북한의 대중국 외교전략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우 (2014). 「북한정치 변천(신정체제의 진화과정)」. 서울: 오름.
- 이상현 (2011). 「체제전환국의 기업개혁 경험과 북한기업 전환 방안 연구 :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 (2010).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한국개발연구」, 23(2): 93-143.
- 이석기·이승엽 (2014). 「2000년대 북한기업 현황(북한 공식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KIET).
- 이성구·연명모 (2011). 「북한 정치학(21세기)」. 서울: 대경.
- 이성우(2014). “북한인권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평가.” 「Jpi정책포럼」 147: 35-51.
- 이성봉 (2011). “한국과 중국의 대 북한 경제적 영향력 비교: 북한의 수출 상품 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5(2): 217-237.
- 이성훈 (2011). “냉전기 북한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의 적응(適應)개념을 중

- 심으로.” 「군사논단」, 66: 85-111.
- 이수석 외 (2012). 「북한인권 실태와 해결방안」. 서울: 프리마북스.
- 이수혁 (2011). 「북한은 현실이다(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말하는 통일외교전략)」. 서울: 21세기북스.
- 이수훈 (2012).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숙자 (2010). 「최근 북한의 경제특구 재추진: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POSRI 경영경제연구」, 10(2): 203-223.
- 이승수 (2014). 「북한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신 (2011). 「북한인권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통일연구」, 15(2): 37-64.
- 이신재 (2013). 「푸에블로호 사건이 북한의 대미 인식과 협상전략에 미친 영향」.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애 (2014). 「북,북갈등 유형분석: 북한 예술영화에 표현된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3: 111-128.
- 이온죽 (2010). 「북한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통일」. 서울: 철학과현실사.
- 이용희 (2013). 「북한의 경제특구정책과 실패요인 -중국 경제특구정책과의 비교분석-」 「동북아경제연구」, 25(3): 267-308.
- 이우영 (2011). 「200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 특징과 전망.」 「나라경제」, 31(11): 21-34.
- 이우영 (2012). 「북한의 사회정책과 인민 생활.」 「통일경제」, 47: 24-29.
- 이인배 (2011).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한인권 문제 개선 전략.」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117-138.
- 이재원 (2012).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인식 연구: 『경제연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춘 (2014). 「베트남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2010). 「중국과 접경국의 경제관계를 통해 본 북·중 교역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철 (2010). 「북한의 경제법제와 거시경제정책의 이중성: 중국과 베트남 경제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1): 173-203.
- 이정현 (2013). 「경제위기와 북한여성의 대응 태도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석 (2012). 「2차 핵실험 이후 북한 중국 관계의 변화와 함의.」 서울: 세종연구소.
- 이종석 (2013). 「북한을 둘러싼 경제정치(개념 특징 함의).」 서울: 세종연구소.
- 이종석 (2014). 「북한 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에 관한 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 이종철 (2010). 「헬싱키 프로세스의 북한 인권 적용 가능성과 함의: 소련 및 동구 변화의 동학으로부터.」 「대한정치학회보」, 17(3): 285-312.
- 이주태 (2013). 「김정일 시기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연구: 비대칭전력 및 군사 도발 사례 분석.」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희 (2010). 「『경제연구(1986~1999)』로 바라본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고찰.」 「북한학연구」, 6(2): 147-186.
- 이철수 (2012). 「긴급구조 북한의 사회복지(필요와 빈곤의 이중성).」 서울: 한울.
- 이춘근 (2012).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이춘길 (2013). 「남북한 공연문화예술 교류프로그램 구상.」 「사회과학연구」, 17: 37-55.
- 이학립 (2012). 「북한의 범죄행태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통제이론과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63: 149-168.
- 이한얼 (2011). 「중국의 대북 정책과 운용: 『전략적 관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 (2011).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OUGHTOPIA」, 26(3): 39-62.
- 이현주 (2013). 「북한주민의 정치적 분리와 불안.」 「북한연구학회보」, 17(1): 147-177.
- 이혜경 (2013).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 연구: 체제수호 전위양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복 (2012).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규·곽정래 (2014). 「북한의 일상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세계.」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1: 623-639.
- 이희영 (2013). 「(탈)분단과 국제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7(1): 355-393.
- 임강택 (2014). 「북한경제의 비공식 시장 부문 실태 분석

-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KINU.
- 임강택·박형중 (201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총괄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 임미주 (2014).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방순 (2014). 「중국의 대북한 원조에 관한 연구 : 중-소 관계변화의 영향」.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상순 (2012).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 오바마 1기 행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8(2): 349-382.
- 임상순(2014).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67:81-120.
- 임을출·이석기 외 (2013). 「2013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4년 전망」. 서울: 산업연구원.
- 임재학 (2011).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요인 분석 :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재학 (2012).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 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 18 사건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36(3): 131-170.
- 임지훈 (2014). 「천리마운동 초기 북한 가족 변화, 1958년-1961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성 (2010). 「북한의 체제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일 선군정치와 김일성의 북한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정 (2012).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의 사회적 관계 변화」.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 (2010).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경제법제 강화에 관한 연구 : 김정일 정권의 경제위기 대응전략 관점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삼열 (2012). “국가 Power-Image를 통해 본 남북한 군사적 갈등 사례 연구.” 「군사논단」, 71: 149-174.
- 장성진 (2014). 「북한군 군사교리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선 (2012). 「미국의 1차 북핵위기 대응 과정 분석 : 엘리스의 정부정치모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호 (2014). 「남·북한 군사전략의 전개과정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환빈 (2014). 「개성공업지구와 소주공업지구 비교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주 (2012).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과 대비(북한의 급변)」. 서울: 살림.
- 전두표 (2013).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방안」.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영 (2010).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북한학연구」, 6(1): 21-39.
- 전미영 (2013). “김정은 시대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17(1): 1-30.
- 전성훈 (201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서울: 통일연구원.
- 전성훈 (2012). “북한 핵위협 재평가와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 「국방정책연구」, 96: 51-91.
- 전영선 (2011). “북한의 대외문화 교류와 문화외교 연구 -해방 이후 북한 민주건설시기의 북-소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5(1): 143-167.
- 전재균 (2013). 「대북 군사적 억제전략 발전 방안 연구 :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사례 분석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명 (2011).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사회주의국가)」. 서울: 삼영사.
- 전현준·김국신 (2011).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전현준·홍우택·이수형·김현욱 (2011a).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 전혜란 (2013). 「북한 성분분류사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두 (2012). “북한의 핵 테러리즘 가능성과 대응방안 연구.” 「군사논단」, 69: 73-98.
- 정경영 (2011). “연평도 사태 평가와 북한 도발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의 안보태세.” 「군사논단」, 66: 133-155.
- 정기용 (2011). “남북한 교류에서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 「OUGHTOPIA」, 25(3): 385-417.
- 정문선 (2013). 「북한의 사이버전 변화 특징 및 영향 요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장 (2011). 「현대 북한의 정치(역사 이념 권력체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정성장 (2012). 「북한 중국 군사교류협력의 지속과 변화」.

- 서울: 세종연구소.
- 정성장 (2013).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 승계 문제」. 서울: 세종연구소.
- 정성장 (2014). 「김정은 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서울: 세종연구소.
- 정영선 (2012).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인권적 고찰.” 「의정연구」, 37: 263-274.
- 정영철 (2012).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과제: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연구학회보」, 16(1): 1-24.
- 정영철 (2014). “김일성-김정일의 인권 담론의 역사.” 「북한학연구」, 10(1): 71-99.
- 정영철 (2014a). “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125-148.
- 정은미 (2012).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6(1): 123-161.
- 정은이 (2011). “북한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달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3(1): 215-251.
- 정은이 (2012).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9(1): 251-291.
- 정은이 (2013). “북한에서의 주택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5(2): 243-277.
- 정은이 (2014).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燒)토지 경작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6(1): 261-302.
- 정일영 (2013). “공장관리체제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당비서-지배인-노동자 삼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17(1): 5-36.
- 정일영 (2014).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년-1961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전국 (2010).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연구 :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창현 (2014). 「김정은시대의 북한(키워드 본)」. 서울: 선인.
- 정철호 (2014). 「북한 유사시 중국 군사개입 대응 한국의 안보전략」. 서울: 세종연구소.
- 정한얼 (2011). “북한 후계자의 외교활동 전개 조건에 관한 연구 8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7(1): 297-317.
- 정현숙 (2012). 「1990년대 북한체제위기와 대응 :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형곤·김지연 (201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동호·남영숙 (2013).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동호 (201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72 : 10-17.
- 조성복 (2011).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과 북한의 핵정책」. 서울: 오름.
- 조성찬 (2014).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법률적 적용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6(3): 175-207.
- 조영주 (2012).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레짐의 동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아·임순희·노귀남·이희영·홍민 (2010).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현·장석영 (2014).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홍익법학」, 15(3): 537-571.
- 조진형 (2013). “유교문화, 경제적 요인이 일제하 초기공산주의 운동에 미친 영향.” 「북한학연구」, 9(2): 67-111.
- 조한범·황선영 (2013).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비교사회론적 관점)」. 서울: KINU.
- 주용식 (2014).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승우 (2010). 「북학인권 관련 정책 및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신 (2014).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결정 요인 : 외교이념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유정 (2010). “북한 학술지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학 -영역별 연구의 주요 주제와 현실정합성-.” 「북한학연구」, 6(2): 84-121.
- 차남희 (2012).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북한사회 통치이념의 향상성과 변용성.” 「담론201」, 15(4): 109-140.

- 차두환 (2012). 「정치이념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세대 및 지역과의 상호작용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은지 (2014). 「북한 사회구조 변화와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엘레나 (2012). 「북한헌법제정과정에 미친 소련의 영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신·채경희 (2011). “북한의 법문화와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형사정책연구소식」, 117: 2-9.
- 최우진 (2014).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 63(12): 146-183.
- 최은석 (2011).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연구학회보」, 15(1): 309-335.
- 최은석 (2013). “북한의 우주개발계획 분석 -법제도적 시각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73: 215-233.
- 최정민 (2014). “북한 핵 억제 전략 연구를 통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향 제시 -파키스탄 및 중국의 핵 억제 전략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77: 11-40.
- 최현욱 (2012). 「북한주민의 남한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정 (2012). 「한국문화의 북한 유입 과정 및 영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일연구원 (2011).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제1차 사이버 인권포럼)」.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2014).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편집부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제3회 통일연구원 사이버 인권포럼)」. 서울: 통일연구원.
- 하상준 (2012). 「북한의 '사회주의강성대국론' 비판 :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태영 (2014).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실화를 위한 협상과 도발 분석: 교훈의 도출.” 「군사논단」, 78: 158-179.
- 학군환 (2011). “5,16군사정변 당시 북한의 인식 및 중국과의 의사소통 과정 연구 -중국 외교부 기밀 해제 문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7(2): 233-263.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2014).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서울: 북코리아.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군사위협」.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2013). 「북한 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 한상용 (2013). 「북한군 병영문화 연구 : 선군시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정 (2014).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양태의 변화 비교 : 1, 2, 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현동 (2014).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정치적 변화.”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1 : 525-530.
- 한현숙 (2011). 「경제위기 이후 북한 지방산업공장 운영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희원 (2013).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50: 29-53.
- 허만호 (2011).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치연구」, 14(2): 137-168.
- 허만호 (2012). 「인민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북한의 인권)」. 서울: 살림.
- 허만호 (2014). 「북한 인권 이야기(현안과 국제적 논의)」.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현기석 (2014). 「북한 사회복지제도 연구 :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민 (2011).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의 사회적 구성.” 「북한학연구」, 7(1): 103-136.
- 홍민 (2012). “북한의 국가성격과 김정은체제 : 북한의 국가와 시장 관계: 위상학적 이해의 가능성.”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191-213.
- 홍성후·양승환 (201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유형의 적용: 국제법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61:105-127.
- 홍우택 (2012).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정책결정 모델을 이용한 전략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홍우택 (2013).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책 연구」. 서울: KINU.
- 홍익표·이중운 (2011).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2010년)」.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홍제완 (2014).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과 능동적 억제전략에 관한 연구 : 역제의 달성 조건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현익 (2013).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방안」. 서울: 세종연구소.
- 황개 (2013).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특구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기식·김현정 (2011).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의 인식과 동향.” 「국제정치연구」, 14(2): 359-388.
- 황나미·이삼식·이상영 (2012).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 복지 실태(건강 및 출산 양육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신영 (2014). 「남북경제협력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원진 (2012).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일도 (2013). 「북한 군사전략의 DNA(핵 장사정보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서울: 플래닛미디어.
- 황재욱 (2012). 「북한의 인권인식과 대응유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욱 (2012a). 「북한인권문제 원인과 해법」. 서울: 선인.
- 황진훈 (2014). 「북한과 중국의 투자-성장 메커니즘 비교 연구 : 재정, 금융, 대외경제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창현 (2014).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제도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히라이와 순지 (2013). 「북한 중국관계 60년(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서울: 도서출판선인.
- Grace E. Chung (2013). 「대북포용정책이 북한 인권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